

SPECIAL REPORT 2

# 중동의 새로운 진앙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글 | 윤여준 부연구위원·권혁주 연구원·장윤희 연구원(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7월 14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독일)과 이란 간에 합의된 일명 '이란 핵 합의', 곧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위기를 맞고 있음은 외신으로 알려진 바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현이 새로운 교착상태를 만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핵 합의 파기 이후 전개될 양상과 이것이 중동 경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어떠한가.

## 1. 요약해 본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시간표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독일)과 이란 간에 맺어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 2015년 7월 14일 체결된 바 있다. 일명 '이란 핵 합의'로 더 많이 알려진 본 합의는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 및 원심분리기 감축, 중수 원자로 중심부 노심 제거 등과 함께 비핵화 이행을 증명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행을 맞아 UN, 미국, 유럽연합(EU)이 대 이란 제재를 완화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사태의 변화가 일어난 계기는 2017년 1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서 비롯된다. 이미 공화당 경선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자신이 본 최악의 거래(one of the worst deals I have ever seen) 중 하나'라 평가하던 그였다. 트럼프의 대 이란 정책 변화는 2017년 10월 13일 JCPOA 3차 검토에서 이란의 의무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승인 거부로 현실화된다(1~2차 검토까지는 승인).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유지하는 것이 해당국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 개발을 종식하는 데 적절치 않은 조치이며, 더 나아가 이란이 JCPOA 규정 일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60일 내에 대 이란 제재 복원에 관한 미 의회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제재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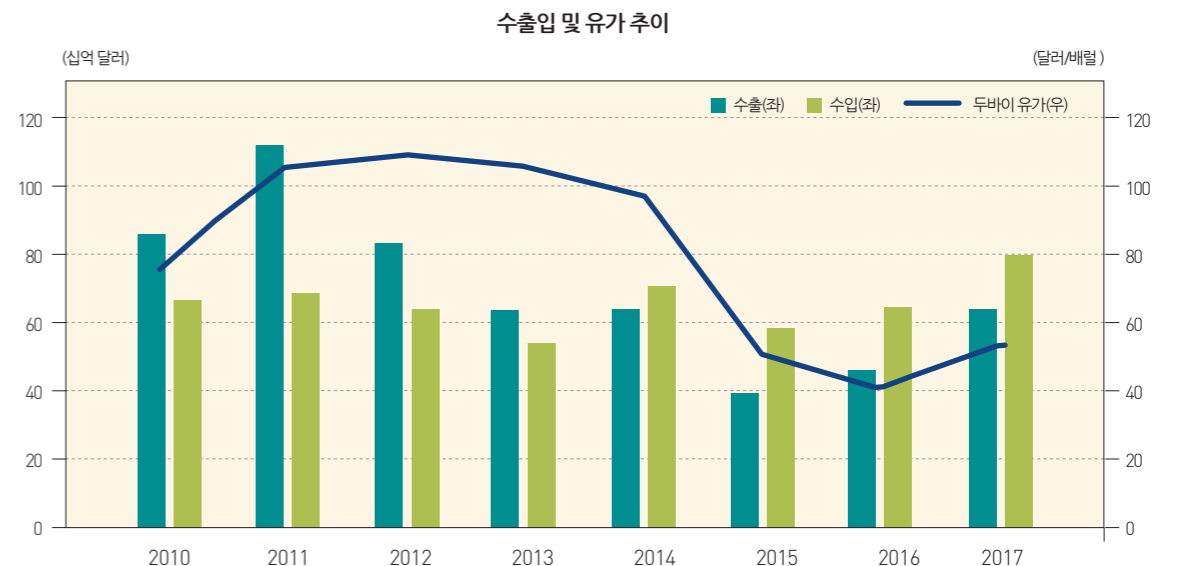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승인 거부는 대 이란 신전략을 발표하며 공식적인 강경 노선을 천명하는 신호탄이었

다. '이란의 불안 조장 무력화와 테러 및 군사 지원 제한'에 초점을 두고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활성화', '이란 체제 부정', '이란 혁명수비대(IRGC) 활동 반대', '이란 탄도 미사일 및 비대칭 무기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었다.

이어 2018년 1월 12일 백악관은 120일 안에 JCPOA의 내용이 재협상을 통해 수정되지 않으면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대 이란 제재 유예를 조건부로 연장한다. 국제 감시 기구의 이란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사찰 수용,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 차단, 일몰 조항의 폐지와 탄도 미사일 개발 및 실험에 대한 추가적 제재 부과가 재협상 내용의 주요 골자였다(일몰 조항에 의하면 JCPOA 이행일 이후 10년이 지나면 원심 분리기 관련 제한이 해제되고 15년 이후에는 우라늄 농축 관련 제한이 폐지된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5월 8일 미국은 JCPOA 탈퇴를 선언하며 대 이란 제재 복원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핵 합의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제재가 즉시 가동되며 기존 거래는 90~180일의 기간을 두고 제재가 복원될 예정이다.

## 2. 핵 합의 이후 이란의 동향과 대처

핵 합의 체결 이후 원유 생산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6/17 회계연도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12.5%에 달한 바 있다. 원유 생산량은 2016년부터 일일 300만 배럴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2월 383만 배럴 수준으로 상승했고, 2017년 이란 상품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28.2% 증가한 1,379억 달러를 기록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도 2012년 46억 6,173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6년 회복세를 보였다.



자료: IMF Dat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검색일: 2018. 4. 25)  
World Bank, Commodity Markets(검색일: 2018. 4. 11)

그동안 이란은 이처럼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제재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JCPOA가 탄도 미사일 등 다른 문제와 무관하므로 자국의 국방, 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문제는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란의 방침이었다. 이런 차에 맞닥뜨린 미국의 제재 복원 사태는 이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당연히,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란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EU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미국의 핵 합의 파기 이후 기업들의 이란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정유회사 토탈(Total)은 이란의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도 이란 원유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GE, 지멘스(Siemens) 등 유럽의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8개 기업이 이란 내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이나 이미 체결된 계약의 철회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EU가 이란과의 핵 합의 유지를 위해 유럽의 대 이란 투자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별어진 일이었다. 이란으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 합의 탈퇴로 인해 이란의 핵 개발 재개 가능성을 주목하게 됐다. 아직 이란은 미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비핵화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 시사하며 나머지 협정 체결 국가들과 합의 유지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 합의 유지를 위한 7가지 조건을 유럽, 즉 합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에 제시했다. 이에는 미국 규탄 결의안 발표, 이란의 중동 지역 정책에 대한 개입 중지, 미국 제재에 대한 지원, 이란 원유 거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해당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핵 관련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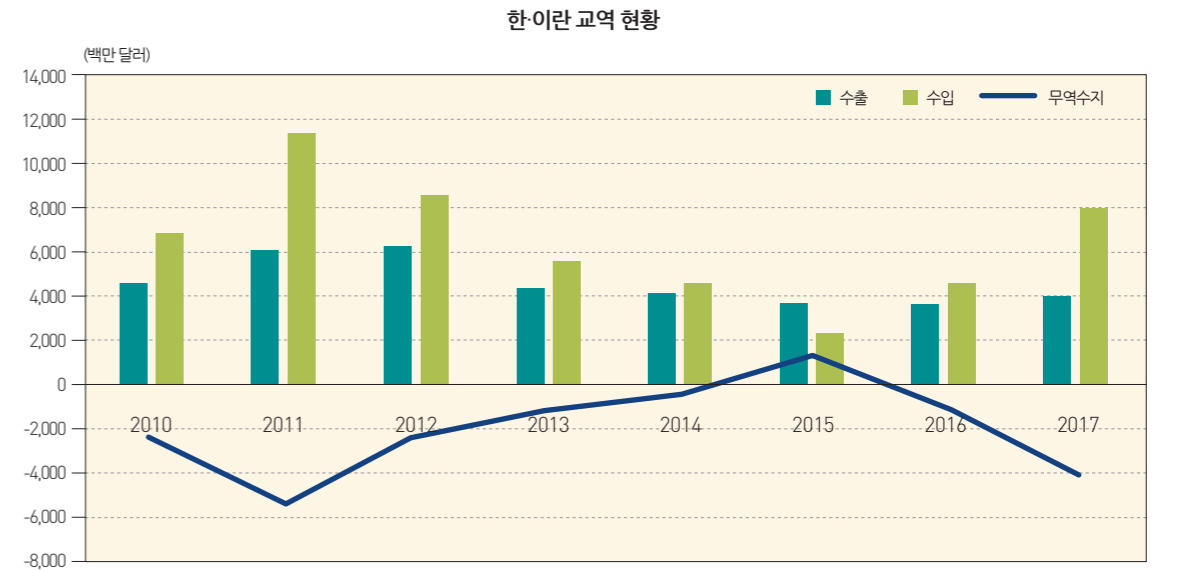
현재 미국의 입장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5월 21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 이란 전략에 반영돼 있다. 이란의 영구적인 비핵화,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중수 처리 중단, IAEA 사찰 관련 모든 핵 시설의 무조건적인 공개, 탄도 미사일 개발 중지 등 12개의 요구 사항들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새로운 핵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중동 테러 그룹 지원 중단 및 반군 철수, 중동 내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 대한 위협 중지처럼 비핵화와 관련성이 적은 사안들도 포함돼 있어 이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중동 지역 내 자국의 동맹 국가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역내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이지만 이와 더불어 중동 지역 정책 개입 등 내면적으로는 상황이 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마리를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3. 한국의 나아갈 바를 모색할 시간

애초부터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가 국제적 안보 위협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대 이란 및 중동 정책이 지역 내 갈등과 불안운 고조시키는 것으로 평가돼 온 터였다. 지난 5월의 핵 합의 파기로 복원된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당연히 해당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 국제사

회가 대 이란 제재를 강화한 이후 2012/13 회계연도 이란의 원유 및 가스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629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경제성장률은 2011/12년 3.0%에서 2012/13년 -5.8%로 하락).

이란뿐만 아니라 해당국과 협력을 추진해온 유럽, 아시아 국가 등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핵 합의 파기 이후 한국도 현지 정세를 주시하며 이에 따른 영향 관계 파악과 대응 방향 모색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대 이란 투자 및 교역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들어 한국의 이란 원유 수입량이 감소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 이란 무역 적자의 주원인이던 원유 수입량이 2018년 1~3월에 345만 톤으로 전년 동기의 569만 톤에 비해 39.4%나 감소한 것.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 무역 국가별 수출입(검색일: 2018. 4. 16)

그러나 이처럼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이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에너지 수입원 다각화, 신규 장기 계약 계획 수립에서 이란을 교역 상대로 적극 고려할 부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제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기술 자문, 컨설팅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또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며 과거의 제재 기간 중 이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거니와,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면에서 한국도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상기 필자들의 리포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정책 및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 경제 Vol. 18 No. 15, 2018년 5월 4일자)에서 발췌 요약 및 이후의 정세 변화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수록. 원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 내 '발간물' → '오늘의 세계 경제' 항목에서 검색가능